

4. 남북회담 개최 지원

2009년 9월 7일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기능이 정상화된 이후, 여러 차례의 남북당국간 회담이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2009년 10월 14일 개최된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2009.10.16), 개성공단 해외공동출장 실무협약(2009.11.23), 개성공단 해외공동출장 평가회의(2010.1.19~21), 개성공단 제4차 실무회담(2010.2.1),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2010.2.8),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2010.3.2) 등 2010년 5월까지 총 7차례의 남북회담이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는 개소 이후 2010년 5월 26일 현재까지 총 43회의 남북간 회담을 지원하였다.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2010.2.8)





03

남북 인도분야 협력

제1절 남북 이산가족

제2절 국군포로 · 납북자

제3절 인도적 지원

제4절 북한인권

제3장 남북 인도분야 협력

남북간 인도분야 협력은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북한 인권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포괄하고 있다.

우선 이산가족문제는 당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서 정부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적십자회담이 2009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십자회담 등 남북간 협의시 송환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편 2007년 제정된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2010년 6월말까지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375건, 탈북 귀환자에 대한 정착금 8건,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1건의 지급이 결정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조건없이 추진

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지속하였다. 2009년에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의 북한내 확산을 막기 위해, 12월 18일에 타미플루 등 치료제 50만 명분을 지원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08년에 북한에서 실시한 인구 및 주택 조사 사업의 결과, 북한의 총 인구수는 2,405만 명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에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2009년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국내 인권단체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인권실태조사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1절 남북 이산가족

고령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적십자회담과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7차례의 상봉행사와 7차례의 화상상봉을 통해 남북한 4,130가족, 2만 848명이 상봉하였다.

2009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은 인도주의 정신 존중의 원칙, 근본적 문제해결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등 인도적 문제해결 3원칙을 제시하고 북한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남과 북은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추석을 계기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2009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금강산)

당국차원의 교류 현황(2000년~2010년 6월)

구 분	남	북	계
대면상봉(17회)	1,780가족(11,227명)	1,793가족(5,873명)	3,573가족(17,100명)
화상상봉(7회)	279가족(2,257명)	278가족(1,491명)	557가족(3,748명)
계	2,059가족(13,484명)	2,071가족(7,364명)	4,130가족(20,848명)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2년만에 재개되었다. 2009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남측 97가족(126명)이 재북가족 228명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북측 98가족(106명)이 재남가족 428명을 상봉하였다. 상봉행사에는 국군포로 2명, 납북자 2명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당국차원의 교류와 함께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2009년 2월부터 민간교류 경비지원 금액을 최대 생사확인 100만원, 상봉 300만원, 교류지속 50만원으로 2배가량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 성사 건수는 2007년 542건, 2008년 314건, 2009년 119건, 2010년 상반기 23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민간교류의 지속적 감소추세는 이산가족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당국간 교류와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교

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교류 절차 및 경비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역
량있는 민간단체를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건수

(단위: 건)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9	200	152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월	계
생사확인	198	388	209	276	69	74	50	35	10	3,836
서신교환	935	961	776	843	449	413	228	61	9	11,391
상봉	208	283	188	95	54	55	36	23	4	1,732

한편 정부는 2008년부터 고령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정책을
설명하고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9
년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9개 지역에서 이산가족 위로방문 및 정책설명회
를 개최하였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서울·경기 지역 미상봉 이산
가족 300여명을 초청하여 남북출입사무소·도라산역·통일전망대 등 남북



2009 이산가족 초청행사(경의선 출입사무소)

분단과 교류의 현장을 둘러보고 이산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초청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정부는 추석과 연말 등 계기시마다 소외계층 고령 이산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0년에도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속초, 여수, 경주 등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지역별 100여명씩 총 300여명의 고령 이산가족을 초청하여, 1박2일간 이산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하였다.

2009년 3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법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최초의 법률로서 제도화하였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주요내용은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정보통합 관리체계 구축,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대북지원,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산가족법의 제정으로 체계적·효율적 교류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고 민간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조 항	주요 내용
제4조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제5조	3년마다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 보고
제6조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9조	상봉행사의 정례화와 상봉 규모의 확대, 면회소운영, 긴급가사방문 등을 위해 북한당국과 협의 의무
제10조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
제11조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12조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	권한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

이산가족 상봉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자료에 대한 현행화 작업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2009년 10월부터 두달 동안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자 중 40대 이상 이산가족 8만 2,371명을 대상으로 안내서한을 발송하여 연락처 등 관련자료를 현행화하였다.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자 12만 8,124명 중 4만 3,990명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8만 4,134명이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등록현황

(2010년 6월말 현재)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50세	계
인원수(명)	4,745	29,572	30,715	11,994	7,107	84,133
신청비율(%)	5.6	35.2	36.5	14.3	8.4	100

2008년 7월 12일 완공하고 개소가 보류중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최소 유지·관리중이었다. 북한측은 2010년 4월 27일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면회소 몰수조치를 강행하였다. 정부는 북한측의 반인도적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귀를 촉구하였다.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1. 개관

6.25전쟁 휴전 이후 UN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하였다. 당시 UN군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000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였다. 실종된 국군의 상당수는 송환되

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탈북 귀환 이후 2010년 6월말 현재 총 79명의 국군포로가 탈북 귀환하였고,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탈북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2009년말 기준으로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북자는 크게 6.25전쟁 중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952년과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 등을 고려하면 8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의한 피납자, 즉 전후 납북자는 총 3,832명이다. 이중 86%인 3,310명은 납북 직후 1년 이내에 귀환하였으며, 8명은 2000년 이후 탈북 귀환하였다. 2010년 6월 현재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는 514명으로 추정된다.

전후 납북자 현황(2010년 6월말 현재)

(단위: 건)

구 분	계	어선원	KAL	군·경	기타	
					국내	해외
피납자	3,832	3,729	50	27	6	20
귀환자	3,318	3,271	39	—	—	8
미귀환자	514	458	11	27	6	12

2. 남북 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

정부는 그동안 남북당국간 회담과 적십자 회담 등 계기시에 지속적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의 경우 이미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교환으로 종료된 문제이고 납북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협의자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하여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북한과 협의해왔다. 그러나 이러